

북한이탈주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문제점

유병선*

목 차

- I. 서론
- II.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 III.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 IV.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화 프로그램과 문제점
- V. 결론

〈국문초록〉

남한사회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동안의 지원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사회 적응에 적절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의 적응 방법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화 프로그램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통합과 화합, 나아가 통일을 준비한다는 목적에 걸맞게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은 그들을 단지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그들이 진정 같은 시민이며 한국 사회에 대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

* 충남대 교수

하고, 남한의 시민들 또한 그들에 대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상호 인정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어: 민주시민교육, 북한이탈주민, 사회화, 통일교육, 거주지 중심 지원

I. 서론

분단의 장기화로 인하여 남북한 주민 간 이념과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서 이질화가 심화되어 한민족의 동질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분단된 민족과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일, 즉 남북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 체제의 통일을 이룬 후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인 사람의 통일이 실현되어야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동안의 삶을 영위해 온 북한체제를 떠나 이질적인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통일 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남북한 주민 간 사회통합에 대한 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살아가기'는 바로 통일에 대비한 '작은 시험장'이라 할 수 있다.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에서 북한이탈주민¹⁾은 공식적으로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일반적인 용어는 ‘탈북자’이지만 탈북자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 ‘북한이탈주민’으로 개칭하였다가, 현재 통일부는 ‘새터

는 ‘인민을 배반한 사회주의 배신자, 체제에 대한 배신자’이지만, 실제로는 ‘난 사람, 깡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위치는 남북한 어디에도 수용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로 취급 되는 실정이지만²⁾, 북한 국내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사회와의 협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인권탄압국가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은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유지하려는 화해와 화합의 조용한 외교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존재의 부각은 남북한 모두에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남한사회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동안의 지원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사회 적응에 적절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의 적응 방법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한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교육된 국민들이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식하고 지지를 보낼 때 국가의 정치체제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대 국민 교육은 한 국가의 문화전통이

민’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법률 행정적 표현은 북한이탈주민이다.

2) 북한은 1998년 개정헌법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죄(구헌법 제86조)를 삭제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기도 하고 시기별로 집중단속을 시도해 왔으며, 최근 김정은 세습구도 및 북중 관계의 밀착 분위기 속에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 지배적인 윤리관과 규범 그리고 국가 이념과 목표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할 경우 국민들에게 실시하는 시민교육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의도는 사회를 민주화하는 것과 인간화 하는 데 있다. 민주화는 인간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지배를 억제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인간이 조성하고 있는 사회구조 중에서 무엇이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지를 규명해 내고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려면 어떤 정치적 참여와 결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김택환 1994, 2).

민주시민교육이 국민에게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은 1) 정치체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할 수 있고, 2)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조성할 수 있게 하며, 3) 국가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일관된 기본정책을 제시할 수 있고, 4) 국민 각 개인의 인생목표 설정과 행위의 선택 및 비판능력을 길러주어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막아낼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할 수 있으며, 5) 애국심을 고취시켜 외국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에 대하여 국민적 저항의식을 갖게 한다(박순영 1984, 14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은 하나의 정치사회화 과정이다. 사회구성원들은 비교적 공통된 정치생활과 관련된 가치체계, 신념, 감정적 태도, 행동 양식 등을 보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사회에 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의 ‘정치문화에 유도되는 과정’(Almond & Coleman 1960, 27)을 필요로 한다.

독일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오랜 기간 동안 실시해 왔다. 이것은 통상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성숙된 인간을 육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정치교육 과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식과 정보를 습득케 하고, 이를 인식하고 통찰하며, 비판할 수 있게 하고, 책임을 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하려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습득의 장이 학교일 경우 통상 정치교육이라 부르고 기타 영역에서 즉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정치사회화라 부른다(전득주 1994, 2-3).

결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이 민주시민교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시민이 없다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시민사회 건설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Ⅲ.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전득주(1996)는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시기 1)미국식 민주주의의 수용과 변용 시기(1945-1960), 2)군사문화의 경제성장기의 반공민주시민교육 시기(1961-1987), 3) 6.29 민주선언 이후의 민주시민교육 시기(1987-현재)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함에 있어 한국에서 시민성과 통합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과 활동을 의미하는 내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1)정권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 2)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정치사회체제의 운영, 3)통치 엘리트의 민주적 실천 의지, 4)국민의 참여, 5)민주적 원리를 우선시하는 사회 풍토 등을 제시하였다(전득주 1994, 12).

그런데 일찍이 전득주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전통적·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학연간의 갈등이 되자 못하고 있어 국민의 일체감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 경제적 분배의 불공정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수십 년 동안의 군사문화는 한탕주의-적당주의를 모든 영역에 만연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강력범죄 및 성범죄가 일어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전득주 1994, 1).

20여 년 전 한 학자의 이러한 지적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를 차치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인 한국의 교육 현실은 과연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음성적인 것의 적응과정이 민주시민이 되어 가는 과정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는 적극적인 선거참여, 즉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도 적극적인 정치생활에의 참여가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을런지 의구심이 들지만 그 중요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IV.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화 프로그램과 문제점

1. 사회화 과정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은 통일이후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의 통일한국에 대한 적응과정과, 한국 주민들의 적응양상에 대한 선경험을 제공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지원정책과정을 통일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안보차원지원기(1953~1962), 보훈차원지원기(1962~1978), 체제선전지원기(1979~1993), 사회복지차원지원기(1993~1996), 통일대비차원지원기(1997~2001), 2007년 1월 기준법령(법률 06.12.21개정)으로 지원정책의 변화를 보여 오다가, 2007년 2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중심의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윤여상 2007).

통일부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인원 증가에 따라 정부의 지원정책을 ‘자립 자활과 직업 친화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정착기본금을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하고, 주거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취업의지 제고를 위하여 장기 취업장려금을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장기 취업을 유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근로능력세대(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와 근로무능력세대(세대구성원 중 능력자가 없는 세대)로 분리하여 근로능력 세대의 경우 생계급여의 특례기간을 축소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개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 NGO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직 및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12-22평형을 알선해 주고 임대보증금 1,3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정착금 지급과 관련하여 1인당 600만원(분기별 분할지급)의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2,140만원까지 지급된다. 생계, 의료보호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월 34만원이 지급되고, 무료진료가 이루어진다. 교육지원은 대학 특례입학 및 등록금 지원을 해준다. 취업지원은 무료직업훈련,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고용지원(임금의 1/2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2009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해외에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 1회에 한하여 기존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지역적응교육(하나센터),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화를 돕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2.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프로그램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수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사회적응 프로그램 미비, 정부의 시혜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적응의지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적응 무능력은 취업능력부족, 대인관계능력부족, 고향가족걱정, 경제적 어려움, 주민무시편견에 의한 심리적 위축감 등 사회에서 당면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난으로 북한이탈주민 10명중 3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조사된다(윤여상 2007). 1997~2004년까지 입국한 13세 이상 탈북자 133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취업자는 466명(70.3%), 정규직원은 24.5%, 임시근로자는 27.9%, 일용근로자는 47.7%로 정규직비율이 크게 낮은 편이고 실업자는 29.7%이다. 이 같은 실업률은 한국의 실업률 2~3%에 비해 약 9배나 높은 것이다.

둘째, 저소득이다. 대부분 취업하면 직장에서 받는 보수는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에 비해, 월소득은 50만원미만 47.7%, 50~100만원은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셋째, 직장생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사회에서 지위가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넷째, 정서적 측면이다. 양쪽의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 및 언어문제, 지식과 기술부족(컴퓨터 등), 외로움과 고독감, 건강상의 문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다.

다섯째, 한국사회의 무관심과 편견, 부정적인 인식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처음 입국할 때는 자신감에 차 있고, 가령 잘살지 못하더라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공 가능성을 회의하고 있으며 무시와 차별로 고민하고 있다. 그것이 오래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외국어대학 중국어 학부에 다니는 모 씨는 이런 말을 했다.³⁾

“제일 큰 장벽이 언어라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앞으로 달리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물체에 가로 막혀 그것을 넘을 수 없고 부딪친 것의 아픔에 고통을 달랜다”

영원히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 탈북자, 제2외국인이라는 인식의 사회의 신분 분류는 북한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이 막혀 있음을 말해주는데, 장벽을 넘지 못하고 한자리에 맴돌지 않게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립과 자활중심을 기본으로 하는 개선조치는 장기취업을 유인하기위한 자립 자활 직업 시스템 개선은 기존의 ‘보호형’에서 취업 등 한국사회에 적응하기위해 노력하는 탈북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한 ‘자립형’ 즉, 일반국민과 차별 없이 지원하는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러한 개선 지원방안은 입국해서 정착 후 교육프로그램이나 단계별 직업훈련과정이 완만히 이루어져서 스스로의 선택능력을 갖추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발적인 직업훈련과정과, 취업능력을 기대하는 식의 물질적 지원과 단기지원에만 집중되어있는 개정 지원 방안은 앞으로 증가될 이탈주민 사회적응 하락수준, 취업 하락수준을 감안할 때 대규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 현상을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립 자활 직업 시스템 즉, 정착금 제공하는 방법과 수준에서도, 이들의 취업지원과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서도, 민간단체의 북한 이탈주민지원 프로그램 구상에서의 모든 것은, 이들의 단순한 경제적 자립, 정서적 안정, 생계보조비의 지급이라는 단편적인 목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목적과

3) 자유터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상담, (낙성대, 기독교 연합단체, 2007. 5. 12. 20:00)

함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다양한 집단과 어울릴 수 있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통합과제와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거창한 가치의 제고나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수행전략에 있다기 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을 피동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고정화시켜 놓은 것에서 이들의 강점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그 강점과 역량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과 분위기를 고창하는데 있다.

V. 결론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이산되어 있는 자기민족을 적극적으로 유입했다는 사례들은 통일에 대한 준비와 귀결 모두 남북주민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사회통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현재에 와서도 사회 구성원 간의 또 다른 분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는 더욱 우리에게 미래 한국사회의 위상과 수준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면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한 동족인 북한이탈주민과의 적절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배타적인 기류를 강화시킨다면, 한국사회에 통일을 꿈꾸기는 매우 요원하고 비현실적일 것이다.

실제로 통일까지 상상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사태와 같은 급박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일과 버금가는 혼란과, 그에 따른 욕구가 발생할 것이란 것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또한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의 자유가 없는 생활에 수 십 년간을 익숙했던 만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의 8주 교육만으로는 자본주의 무한경쟁에

서 살아남을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탈북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는 단계별 직업 훈련기관이 설정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거주지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네트워크가 설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경제적 지원 차원만이 아닌 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고충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 단계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도록 만드는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런데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중국 연변대 김 모 교수와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중국인들이 당에 의해 10년 이상 하향식의 시장경제체제 교육을 받고 나서야 체제변화에 적응하였지만, 북한은 이미 10년 이상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경제체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미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자본주의체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자본이 없고, 이끌어 줄 연줄이 없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프램이 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방랑자의 처지로 그들을 전락시킬 경우, 이들은 스스로 한국 사회에서 터득한 생존방법(시위·집회·압력단체화)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배고픔을 달래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한 이후, 적극적인 정치생활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은영, “위기극복 주체로서의 가족: 남북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6.
- 김택환, “독일민주시민교육의 전개과정”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 김홍광,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7.
- 권영길, “04~05년 여성 이탈주민 지원정책에 관한 평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
- 박순영, “서독의 정치교육” 「정치교육」, 국민윤리학회 편, 서울: 형설출판사, 1984.
-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및 조기 정책 방안”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 전득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 Almond, G. A. & J. S. Coleman(ed), The Politics of the Development Are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The Contents and Issues of the Civic Education Concern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Yoo Byung-Sun*

<Abstract>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into the South Korean society is rapidly increasing and the issues of support measures not meeting the level required for them to realistically settle into the our society is being raised frequently. Under such background, this research intends to grasp the contents and problems by approaching the adaptation method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from the civic education perspective. This research first examines the definition of civic education and the status of the present civic education in South Korea.

Conclusively,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an organized civic education concern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light of the purpose to socially integrate and harmonize them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going further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Such education must go beyond the mere methods of adapting to capitalism but must be about sharing democratic values and accepting them as our own citizens and this entails the need for a mutual recognition procedure whereby the South Korean citizens recognize them as equal citizen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Civic Education, Socialization, reunification, recognize

* Professor of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논문접수일자: 2011년 11월 14일, 논문심사일자: 2011년 12월 02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2월 08일